전북연구원이 선정한
2017 전라북도 정책아젠다 10

2017. 01. 10

연구진
김동환 이관수 황영모 김지원 최은구
이강진 김재구 김상현 이정훈 이종섭
장세일 정영창 김사백 이상재
전라북도 2020 대도약의 전환점

2017년은 국가적으로 전라북도에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시작된 자국중심주의는 미국의 트럼프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호호주의라는 새로운 세계경제와 외교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2017 AGENDA 10

1. 생생성장과 혁신성장으로
   삼성농생성원
2. 스마트농장으로
   글로벌 트랜스강구축
3. 통수·공업산업
   전북성장 선도
4. 해양수자원, 글로벌 경협, 동서교류 시동
5.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위기돌파

- 사람중심 상생농장과 농생명혁신기반의 연계
- 전북형 농촌활력 구현을 통한
- 농촌미움 경제
- IoT기반 농부들 농생명 산업 혜
  브 구축
- 전북투어패스 전시관 '원스톱
  관광관련'
- '2017 전북 방문의 해' 관광객 1만
  3,500만명 농산물 동해 총계
- 국제형식 상생작업 개발을 활용
  트랜스강구축
- 통수산업 엔터 후속대응 조속
  하며
- 제3 공간이하, 동서교류, 동서교류
  활성화
- 해양수자원 활용, 경제발전
  활용
-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산업혁신
- 3D프린팅, 공간정보, 바이오,
  도시형 생활 변화를 '스마트융합'
  혁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첫해로 인구절벽에 의한 소비절벽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형 신산업에서 미국, 일본 및 중국에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넷 크래커' 위기상태의 지속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선거가 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적, 국내적 정치사회적 위기상황을 전략적으로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달리는 앞에 채찍을 가하듯 전라북도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내발적 발전전략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2017년은 새만금사업, 국가생태클러스터, 기업입주, 탄소산업 등 전략적으로 주력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해이다. 2017년을 삼각농장, 토폴관광, 탄소·금융산업, 새만금, 환경·복지 분야의 2020 대도약을 위한 희망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전북연구원은 2017년을 전라북도 2020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2017년 10대 아젠다를 선정했다.
인천6기는 도정 1순위 정책으로 상락농정을 추진해왔다. 전라북도는 '상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민이 중심이 되는 영실상부한 '민관협치'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2017년에는 2년간 이루어진 '민관협치' 경험을 통해 지역농정 의사결정에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농정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2017년은 한국식품연구원과 국민연금공단이 혁신도시에 입주하면서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 민간육중연구단지에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원년이다. 새만금 농업용지도 1단계 부지조성이 완료된다. 2017년은 상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이 본격 활성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추진과제 1. 
사랑심장 삼락농정과 농생명 혁신기반의 연계

'봄맞이는 농민, 재배하는 농업, 사랑하는 농촌'을 위한 삼락농정(三樂農政)은 농정 가바닌손을 통해 농정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신을 최저가격보장제, 생산마을전달기 등은 사랑심장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참여형 농정체계 구축 등이 주요 성과이다. 이전과는 전라북도에 입지한 농생명 연구기관, 농생명 SW 융합플랫폼, 국가식품플랫폼,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의 농생명 기반과 연계를 통해 농산업 혁신 생태계(value chain)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사랑심장 삼락농정을 넘어 농산업의 혁신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

추진과제 2. 
전북형 농촌철학 통합체계 구축 

농촌철학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 지역수익의 마지막 봉우리다. 농촌철학 활성화가 농촌철학의 지름길이다. 전라북도 첨단정책이 대한민국 농촌철학의 모델로 입증되고 있다. 마을들간 6차산업화, 귀농귀촌 등을 통합 지원할 '전북농어촌지원센터'가 출범한다. 또 11개 시군에 '농촌철학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130여개 농촌철학 참여한 '농촌철학협동취업조합'은 마을공동 사업조직으로 농촌 현장의 품민한 낙경로 기대된다. 이는 아울러 마을, 부문과 부문을 넘어 전북형 농촌철학의 손도와 낙경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 3. 
IoT기반 온실적 농생명 산업 협력 구축

전라북도는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 국립축산원 등이 이전하여, 2017년에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을 마무리하였으며, 전북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만 2,000명이 넘는 아시아 최대의 농생명 연구기관 집적지가 된다. 2017년은 연구를 넘어 농생명 산업화의 원년이 될 예정이다. 국가식품플랫폼, 민간육종연구단지의 기업인수와 함께 농업기술융합체제가 이전에 이르게 되면 농생명 연구결과의 산업화가 촉진될 것이다. 특히 1단계 세안과 농업용 지조성이 완료되어 수출농업을 위한 창출농업생산기지로 조성된다. 농식품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인건의 국가식품플랫폼, 농생명 연구를 담당하는 혁신도시, 그리고 대규모 농업생산을 담당하는 농산이 결합하면 전라북도는 농업생산, 농생명 가공 체제가 형성되어 아시아 최대의 농생명 산업 협력 구축 될 것이다. 2017년에는 농생명 전문화 가격체계(중고-농가계-생산기공자)의 연계와 혁신을 통해 전라북도를 아시아 농생명산업 기지로 육성해야 한다.
2017년에 전북두어패스의 전면시행과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대회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FIFA U-20 월드컵이 전라북도에서 개최된다. 차질 없는 대회 준비로 2017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서 토탈관광의 진수를 선보여야 한다. 더불어 새만금 개발의 터닝포인트가 될 2023 세계장애인 대회가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다. 잼버리를 반드시 새만금에 유치하여 국제공항 등 관광 인프라를 확보할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추진과제 1. 
전북투어패스 전연시행 ‘원스톱 관광’실현


추진과제 2. 
‘2017 전북 방문의 해’ 관광객 3,500만명 유치 촉력


추진과제 3.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로 글로벌 토피컬 관광 활성화

세계체육대회선수권대회가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전주에서 170개국 2,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8천만 대권도인의 이목을 주목하게 관광객 유치 108억원 동 총 211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4개국이 참가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이 5월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전을 시작으로 23일간 전국 6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전체 1,000여 명의 선수단과 인원, 8,0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경기당 약 2만 명이 관람할 것을 예상한다. 2023년 출범 101주년을 맞는 대한스카우트는 새로운 100년을 새만금에서 시작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세계 스카우트 총회에서 최종 개최지가 결정된다. 전북도는 정비가 유치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수도도 등 사회간접적자본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정비가 유치를 위해 투표권을 가진 세계 각국의 지도자를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조직적 홍보가 필요하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총 714억원) 예타 통과로 전북 탄소밸리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2021년까지 R&D 과제(11건)와 기술창비 구축 분야 투자 증가로 전북 탄소산업 성장기반이 강화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의 2017년 2월 이전으로 전북이 연기금투자 증가 일대에서 역할을 수행한 기반 마련의 원년이 된다. 금융바운드조성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과 더불어 금융산업지원시스템, 전문인력양성 등을 포함한 특화금융산업 육성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탄소산업과 금융산업이 전북도의 신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성숙기산업 중심의 전라북도 전략산업을 신산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산업 육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1.
탄소산업 예타 후속대응 조속히 마련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동과로 전라북도 탄소밸리 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배제되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조정을 포함한 예타 후속대응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분야를 중심으로 R&D 사업 발굴 및 R&D 상용화 촉진, 효율적 장비구축 등 탄소산업 육성체계 구도화 전략을 재설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되지 않은 분야의 대응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전주 탄소섬유가산산업단지 조속 조성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이 결실한다.

추진과제 2.
‘제3 금융허브’ 육성 로드맵 수립

2017년 2월이면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융전담조직 산성, 금융타운 조성,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양성 등과 같은 특화금융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와 연계된 금융기관들의 이전촉진과 연기금과 농생명 금융 특화전략으로 전북을 제3의 금융허브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혁신도시 시내버스 노선개편(2017.2월), 전북농축산물아이보드(2017.3월), 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문화체육센터 설계착수(2017.3월) 등 우수한 청주여건 조성으로 명품 혁신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추진과제 3.
미래성장 대비 전략산업 구조 재편

자동차, 기계, 조선, 화학 등 성숙기산업 중심의 전라북도 전략산업을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성숙기산업 쇠퇴가 현실화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산업구조 고도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정책을 성숙기 산업 중심에서 농생명산업, 탄소산업과 (특화)금융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략산업 육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청 개청과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과 함께 원활하고 효율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동서2축과 남북2축 간선도로 등 새만금 관련 기반시설 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범파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새만금항만과 함께 전북의 하늘길을 열어줄 국제공항의 필요성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국토의 동서간 교류확대를 통한 ‘통합의 시대’의 공간적 요구에 있어서도 새만금과 SOC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추진과제 1. 
새만금 용지매립 공공참여가 해법

새만금사업은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참
여가 저지부정한 상황이다. 매립공사부터 시작해야 하는 사업참여에 있어 비용부
담의 가중과 사업기간의 불확실성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민간 참여에 장애요인으
로 지적되고 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매립을 통해 최소한
원형지 형태의 부지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
도해야한다. 글로벌 경기침체 등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용지매립이란 정부투자 및 공기업 참여 등 공공투자를 통해 속도감 있는 새만
금 내부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추진과제 2. 
전북 하늘길 열 '새만금 신공항' 준비 만전

전북권 신공항은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 도내 기업유치 및 대규모 세계대회 개최
를 위한 해상기반시설로 2016년 5월에 '제5차 공항개발증장기 종합계획'에 반
영되었고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자체 발주하여
2017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 전북 속현사업에 국제
공항의 대항공사에 맞는 공항을 조성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마련되며 2017년에는 정부의 경
제성 부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적의 공항입지 결정에 전북도인의 충격을
기울여야 한다.

추진과제 3. 
동서연결 교통망 둘어 '상생의 길' 모색

호남과 영남을 잇는 필수 교통망으로 꼽히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완성이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2016년 말 고시된 교통도로건설계획(2016~2020)에 무주-대구 개 고속도로 사업이 추가 건설사업으로 반영되었다. 이는 새만금에서 포항으
로 이어지는 한반도 허리축(282.2km) 중 유일한 단절구간이었던 '무주-대구' 구
간이 추진됨과 함께 전국간선도로망(7×9) 중 동서 3축에 편입한 연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동서축의 취약한 네트워크 연결성 확보로 환경전환과 환경화전의 경제,
교통, 문화의 소통의 창이 마련 될 것이다. 무주-대구 사업을 추가 건설사업에서 '신
규직속사업'으로 전환하고 메트로디시 조사 동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호남
과 영남이 아니어도 양상과 상생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전주-김천 철도노선
구축 등 동서축간철도 역시 동서간 통합을 위해 논의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정부도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4차 산업혁명을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으며 이를 지방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ICT 융합, 사물인터넷, 지능주행, 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 기술과 도시/농촌 융합 등을 의미한다. 밝은 미래와 더불어 지역의 일자리 감소, 지역 간 경제 양극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4차 산업혁명이 전복에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전라북도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달려있다.
추진과제 1.
제조업의 위기 스마트공장으로 동파구 모색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이 쇠퇴하던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 있다. 전북지역 제조혁신 역량 강화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라북도 제조공장에 각종 스마트센서를 부착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스마트패키징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와 IT의 융합인재육성,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의 공정과업 등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만약 기계에서 기계와 기계간의 초연결(Hyper-Connected)시대에 전북의 새로운 기회와 미래가 있다.

추진과제 2.
전북형 4차 산업혁명 : 3D프린팅, 공간정보, 바이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전북의 열쇠로는 3D프린팅, 자율주행과 드론의 공간정보, 농업용 로봇과 농생명 ICT의 바이오 등이 있다. 전북은 전통 능도에 ICT를 융합한 농생명 IT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을 본격 육성할 전략부터도 신설 된다. 3D 프린팅 호남가정센터도 전북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에 터를 잡을 예정이다. 상용화 기반의 자율주행, 농생명 기반의 드론 등 공간정보산업은 전북이 놓치면 안 될 분야로 관련 사업이 반드시 착수될 수 있도록 온해도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3.
도시와 농촌 생활 속에 ‘스마트융합’ 혁명

4차 산업혁명은 공장, 산업 및 기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도민이 살고 있는 도시와 농촌까지도 파고 들 수 있다. 전주 한옥마을의 주차문제, 전북 로봇파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강화, 장기적으로는 새만금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조성을 도민 편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ICT 융합화 요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민의 삶 속에 사물인터넷 등을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시민과 함께 미래를 맞대고 미래를 그려내야 한다.
살고, 일하고, 돌아오고 싶은 전북

추진과제 1.
전북형 인구정책 추진 '인구절벽' 극복

전라북도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출산과 인구이동이며 이들은 일자리, 주택, 출산·육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2015년 전라북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사유 1위가 일자리, 2위가 거주지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청년층 지역에 거주를 하고, 농촌에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살고, 일하고, 돌아 오고 싶은 환경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산비용 뒤리, 청년창업특구, 과 소통마을지원조례 등의 통합적 인구정책 추진으로 사람 찾는 전북을 만들어야 한다.

추진과제 2.
'인구댐' 중핵도시·연단위 생활경제권 육성

기후변화(기온상승)에 따라 전염병 발생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인수공통 신종 전염병은 120종으로 그 중 30~40%가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5) 전라북도 차원의 위기 대응을 위한 강명병 관리 인프라 확보, 예방 및 대응 훈련, 도민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3.
생산가능인구 유입으로 경제활동 도모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서며 전라북도는 2015년을 기준으로 2030년 13만 8천명, 2040년에는 27만 1천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소비전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력난과 연계된다. 전라북도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의 적극적인 고용을 확대정책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특히 외국인적용법 위어난 외국인 인재영입전략을 세워 전라북도의 경제활동을 도모해야 한다.
행복정책으로
‘가치 있는 성장’ 추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인구가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경제중심의 성장정책이나 소수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삼던 기존의 복지패러다임으로는 다가올 사회적 위기를 헤쳐 나가기 어렵다. 사회적 재분배가 궁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산층의 빈곤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복지로 바꾸어야 한다. 2017년 대선의 의제로 공정분배가 주목받고 있다. 경제적 성장과 개인 삶의 질이 동시에 보장되는 ‘가치 있는 성장’시대의 행복정책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1. 사후적 처방에서 예방적 복지체계로 전환

지금까지 복지정책은 빈곤과 실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일부 취약계층의 사후적 처방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도민 다수가 빈곤층으로 정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복지체계가 필요하다. 주민의 복지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예방적 복지의 첫걸음이다. 따라서 복지시설 중심으로 간접지원이던 복지예산 지원방식을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회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추진과제 2. 마을 단위의 주민참여형 행복공동체 조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이 기존의 제도적 지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지역사회 안전망의 공간은 마을이고, 정책목표는 행복이다. 생활환경인 마을 내에서 상호적으로 지역주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행복공동체 조성은 전략적이고 구체적 방법으로 추진해야 할 새로운 복지모형이다.

추진과제 3.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역량 강화 필요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는 시민사회가 성숙될 때 가능하다. 시민사회는 우리의식, 참여의식, 공동체의식이 깊거나, 특히 공유된 이해, 목적, 가치를 토대로 강세되지 않은 집합행동을 필요로 한다. 민주시민으로서 보편적이고 실천 가능한 '시민역량'을 시민 스스로 마련하는 일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시민사회의 주체로서의 인식, 정치, 참조적 역량에 대한 생애주기를 교육도 필요하다.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시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 등을 새로운 한해가 되어야 한다.

(그림) 예방적 행복 공동체 조성방안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는 더 이상 봉철예보만 오는 현상이 아니라 사계절 나타나는 불청객이 되었다. 이길 일기에와 함께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창간한다. 갈수록 강해지는 여름 한살에 피부를 가리고, 가음, 홍수, 이상기온, 가을 태풍으로 조용한 날이 없다. 기온이 열어지면 겨울철 찾아오는 조류독검, 구제역 등의 기축질병과 육감유형 소식에 다시 마음을 졸인다. 이제는 말로만 듣던 지진 진동을 몸소 체험하고,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과 인근 공장에서 유효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년 365일 반복되는 국내외 환경 위협은 전국도도 예외가 아니다. 2017년은 신정부 준비와 함께 과학적인 사전대책과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의 원년으로 안전은 최우선인 안전 민감증 시대를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
추진과제 1.
폭염, 가뭄,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 적응 협업 강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이에 진행 중인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적응 대책이 시급하다. 기후변화는 진행 중에 있어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일상 모든 영역으로 건강-재난재해-농업-산림-환경-산업 등 유관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특히 2017년에는 각 분야별 협력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경부 정책기조에 맞는 녹색산업 및 기후변화 대응 선구 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추진과제 2.
과학적 정보제공 위한 생활환경 모니터링 강화

전국적으로 높은 대기오염물질 농도는 도민의 건강 위협은 물론 전라북도 청정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초미세먼지(PM-2.5)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성장특성, 배출원 기여율 등을 파악하고, 도내 미신고 표출원 및 외부 유입 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대기 오염 측정망 확충이 필요하다. 강화 괴한의 역할인 생활지역에서는 측정망 설치와 함께 피해예방이 적절 참여하는 모니터링 병행이 필요하다. 제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진 발생, 폭염병 발생,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근이다.

추진과제 3.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해의 위험이 우리생활 곳곳에 도달하고 있다. 강각스런 재난재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문가, 유관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체의식을 가진 도민들의 초등대응이 필수이다. 폭염시 행정요령, 지진 발생시 대피방법, 강염병 발생시 주의사항, 인근 공장 유해화학물질 배출 사고시 대피소 위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 및 지자체의 구조적 대책(Hardware), 비구조적 대책(Software)과 함께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Humanware)이 필요하다. 안전 거버넌스 구축에서 정보전달체계 확립과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해심이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면서 과거와 같이 주력 제조업에서 대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기존 청년일자리 사업은 기업에 청년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력을 공급하는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기업의 적은 지역 어업상 이들 사업의 효과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타지역으로의 유출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청년 문제를 일자리 뿐만 아니라 살의 잘 개선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
추진과제 1.
청년 기본조례 실행-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전라북도 청년정책의 지원 방향을 정립하고 청년 고용, 창업 지원, 삶의 질 개선 및 문화 복지 활성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 같으므로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청년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정책 수단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청년 수요 맞춤형 정책들을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진과제 2.
청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

도내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청년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의 일자리와 더불어 삶의 질이 달려있어야 한다. 청년들은 대상으로 창업,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북 청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청년 생활의 전 과정의 지원 시설에 대한 DB를 별도로 구축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유형의 지원 사업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라북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포럼과 더불어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청년네트워크의 허브가 필요하다.

추진과제 3.
‘전북형 청년특구’ 조성을 청년 창업 활성화

일자리는 더 이상 기존 기업으로부터 만들어내는 데 한계에 도달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년창업을 적극 장려하여 미래 성장을 동력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창업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예술 등 경쟁력 있는 자원들을 창업과 연계해야 한다. 청년창업 종합 지원 기반과 함께 청년 기업 제품의 전시 판매와 청년 문화 커뮤니티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전북형 청년창업특구’를 조성해야 한다.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대국구기, 하나의 중국, 완벽히고 등의 대외정책은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리적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은 한반도의 경제와 안보를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에서 실익을 달보할 수 있는 전라북도 주권의 대응은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대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대선은 전라북도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다.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끌어내는데 대선안전한 게 없다는 점에서 기회이다. 하지만 국정공책과 대선정책 속에서 전라북도의 현안들이 추진동력을 잃은 채 표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기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리는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1.
앞당겨진 대선 대비 지역발전 전략 수립
전략과는 어느 지역보다 앞서 대선공약을 발굴하고 있다. 현실가능한 대선공약을 위해 첫째,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둘째, 과학연계형 공약이 필요하다. 정남은 강주와 중장기발전을, 대전은 중장기과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경북은 중부권(일명 한반도 해양경제권) 사업을 개발 중이다. 전라권, 충부권, 특히 세종-충청권과의 연계 등 광역지역 간 연계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 셋째, 선정된 공약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추진과제 2.
국정공백-조치대선 속 전북현안 추진동력 확보
2017년 5월에 U-20월드컵이, 6월에 세계대전도대회가 개최된다. 세계대전회 대회는 최종 투표 전인 2017년 상반기에 국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북의 주력산업과 적절해 있는 규제프리존은 단계적 정부 추진이 불가능하다. 대선공약이 사실상 추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정부공약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국정공백과 조치대선으로 억류가 까고 있는 현안사업을 정점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점대책이 필요하다. 사업별로 행정사례사례단계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

추진과제 3.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전북 산업의 응전(應戰)
중국의 산업성장력 강화 및 시드보호 등을 통한 저국중심주의 정책과 테크크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침해하고 있다. 세계의 소비시장인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대일로의 21세기 해상실조로드와 연계한 해양 산업 및 관광 기지를 육성해야 한다. 둘째, 중국인이 선호하는 한국의 음식, 전통문화 등 한국의 한국문화 기반의 연관산업 및 파생상품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전라북도 농업의 직업자 피해가 우려된다. 전북산업의 대응과 도전이 필요하다. 첫째, 한미 FTA 체결문에 대비한 철저 대응으로 풍부한 요리문화와 함께 한국의 발문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대아 통상 리스크 분석 노력을 위해 수출가능한 중건기업 발굴, 육성과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로 확보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